

KBA WEEKLY BRIEFING

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

2023.01.02 - 01.06

VOL.342



KBA Europe
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



한국무역협회
브뤼셀지부

CONTENTS

I EU TRADE POLICY

- ▶01.02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
- ▶01.02 크로아티아, 1일부터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
- ▶01.03 EU 집행위,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 검토
- ▶01.03 독일, 국내법에 의한 '공급망실사법' 1월 1일 발효
- ▶01.04 EU 집행위의 2023년 주요 현안 개요
- ▶01.04 독일,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전화 전략 개편 추진
- ▶01.05 프랑스,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
- ▶01.05 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
- ▶01.06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

II EU 환경규제 뉴스 - KIST EUROPE 제공

- ▶01.06 유럽집행위원회, 최종 CLP 개정안 발표

①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

- 2023년 EU의 통상 분야 주요 현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, EU-미국 통상갈등, EU-중국 관계 재정립 및 적극적 대외 통상정책 전환 등이 지적

● 우크라이나 전쟁

- 다음 달로 2년 차를 맞게 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올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공급망 재편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략에 주력할 전망. 또한, 올해에도 러시아 제재를 위한 관련 통상 규제도 계속 강화될 전망

● EU-미국 통상갈등

-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(금)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이행 관련 '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'을 발표, 수입 전기차도 상업용 리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유럽 생산 전기차도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
- 또한, 같은 날 발표된 '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드라인'(3월 중 발표예정)의 방향을 설명한 백서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정의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, EU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IRA법과 관련한 EU의 우려를 일부 해소
- 이에도 불구하고 EU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 및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한 IRA법상 차별적 요소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,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

● EU-중국 관계 재정립

-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의 대외정책적 관심이 러시아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나, EU의 중국 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올해 주요 통상 이슈로 다뤄질 전망
- 특히, 조만간 러시아-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EU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심화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우려

● 공급망 재편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

- EU는 중국, 러시아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작년부터 다수의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에 주력

- 최근 EU-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, 인도네시아, 인도, 뉴질랜드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이 주목

● 브렉시트

- 2021년 브렉시트 완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통관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는 EU에 대해 유연한 협상 의지를 시사
- 다만, EU와 영국의 지금까지의 협상 경험에 근거,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지적

② 크로아티아, 1일부터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

●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결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,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됨

-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* 국경을 개방,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-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-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됨

*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벨기에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등 26개국

-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,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

● 또한,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'쿠나(Kuna)'에서 유로화로 변경됨(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)

-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병기해온 바 있으며, 향후 2주 동안 쿠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소매상 등은 상품 판매 대금을 쿠나로 수령하더라도 잔돈은 반드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함
- 유로화 통화 변경에 따라 일부 물가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, 지난 수개월 유로화 가격 병기를 통해 통화 변경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이미 반영되었으며,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

③ EU 집행위,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 검토

- EU 집행위는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심사를 강화한데 이어,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
 - 2023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, '(EU 기업의) 역외 전략적 투자의 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'이라고 설명
 - EU가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지원금이 역외 투자 형태로 적대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
 - EU 차원의 역외 투자심사는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로,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반도체,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
 - 다만, 통상정책과 달리 투자분야는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인 점에서,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역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
- 역외 투자심사는 對중국 강경노선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,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인 2020년 EU-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(CAI) 체결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
 - 최근 독일 정부는 對중국 정책 초안에서 '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독일 및 유럽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'이고 언급한 바 있으며, 작년 역외 투자 제한의 일환으로 중국 신장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보증을 제한한다고 발표
- 한편,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역외 투자심사 강화 구상은 미국이 2022년 도입한 '핵심역량방어법(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)'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

④ 독일, 국내법에 의한 '공급망실사법' 1월 1일 발효

- EU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이른바 '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법'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, 독일 국내법 차원의 '공급망실사법'이 1월 1일 발효
 - 독일의 공급망실사법(Supply Chain Act)은 기업의 법률적 형태,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 상관 없이 종업원 수 3,000명 이상인 약 900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, 대상 기업은 2024년 종업원 수 1,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.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,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
 - 실사 내용은 아동노동, 현대판 노예제, 강제노동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환경에 대한 것으로,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, 정기적 위험 분석 수행, 위험 관리제도수립 및 구제 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, 공급망실사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함
 -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(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, BAFA)이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위험도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실시하며,

-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 이상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2% 또는 최대 800만 유로, 4억 유로 미만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0.35% 또는 최대 2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, 벌금이 특정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독일 업계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우려 법률 발효의 연기를 요구, 지난 12월 독일 야당인 기독민주당(CDP)이 2025년으로 공급망실사법 발효 연기를 추진했으나 무산됨
- 한편, EU도 EU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독일 국내법에 의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라는 평가

⑤ EU 집행위의 2023년 주요 현안 개요

- [공급망실사법] 법안은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공급망실사의무 및 피해구제를 규정한 것으로, EU 이사회는 지난 11월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
- 금기 유럽의회와 집행위의 임기가 만료하는 2024년 4월까지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5월 이전 관련 확정된 후 입법기관 간 협상(trilogue)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
- [통상위협 대응조치] 유럽의회, EU 이사회 및 집행위는 작년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의(trilogue)에 착수하였으나, 12월 개최된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
- 1월 23일(월) 개최 예정인 차기 협상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스웨덴이 EU 이사회를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할 예정. 법안의 최대 쟁점은 통상위협의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EU 이사회는 판단 및 발동 권한을 이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
- [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]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월 합의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법안이 오는 10월 1일 발효
- 이에 따라 EU에 수입되는 철, 철강, 시멘트, 알루미늄, 전기, 비료 및 수소 등의 수입자는 10월 1일부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,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. 탄소집중배출 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
- [역외보조금규정] 작년 7월 법안이 최종 확정된 역외보조금규정이 7월 12일 발효 예정
- EU 집행위는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역외에서 수령한 보조금의 경쟁왜곡 여부를 판단하고, 경쟁왜곡 판단 시 보조금 상환, 인수합병 제한 또는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부과 가능
- 집행위는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이행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한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

- **[지리적 표시보호제도(GI)]** EU는 와인, 주류 및 농산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산된 상품의 생산지명 상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개편을 추진
 - 이번 개편은 제도 전반의 개편보다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른 GI 상품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. 집행위는 GI 보호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EU 지적재산권청(IPO)에 부여한다는 계획이나, 유럽의회가 이에 반대
- **[반도체법]** EU 집행위는 작년 2월 반도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이른바 '유럽반도체법(Chips Act)'을 제안, EU 이사회는 지난 12월 이사회 입장을 확정.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의가 개시될 예정
- **[일반특혜관세제도(GSP)]** EU는 2023년 말 만료하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(GSP) 개정을 추진
 - 작년 유럽의회(6월)와 EU 이사회(12월)가 각각 기관별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위한 3자협상(trilogue) 개시 예정
- **[단일시장 긴급조치(SMEI)]**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등 단일시장 공급망 위기 시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, 생산라인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 법안을 제안
 - EU 이사회와 산업계는 기업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법안에 우려를 표명. 유럽의회는 12월 법안 특별보고관 및 소관 상임위(내부시장위)를 확정, 법안 심의를 개시
- **[브렉시트]**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통관 및 지브롤터-스페인 이동권 문제 등을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접근 태도를 시사, 올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고조

⑥ 독일,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전화 전략 개편 추진

- 독일 정부는 3일(화) 일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광물 원자재 의존도를 완화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광물 원자재 수급 전략 정비 계획을 발표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에 따르면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확대로 2040년 배터리 원료인 리튬의 수요가 42배 증가하는 등 주요 핵심 광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
 - 독일은 27개 핵심 광물 원자재 가운데 21개의 원자재를 100%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,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을 교훈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핵심 광물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추진

- 독일 정부는 이미 2020년 광물 원자재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나, 동 전략은 주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촉구하는 내용인 점이 한계로 지적,
- 이에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반영하고 특정 광물 원자재의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
- 또한, 지난 9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 '핵심 광물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'을 제안, 집행위가 올 1분기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나,
- 광물 채굴 등은 회원국 고유권한에 해당하여 각 회원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이 이번 독일 정부 발표의 배경으로 평가

● 독일 정부의 핵심 광물 원자재 전략은 자원 재활용 및 국내 광물 채굴 확대,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둘 예정

- [재활용 및 자원 효율 확대] 현재 독일의 광물 원자재 재활용률은 13.4%에 불과, 정부는 광물 원자재 재활용 및 자원 효율성 강화 등 순환경제 확대를 추진. 이는 자원 재활용률을 두 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 EU 집행위 권고와 같은 맥락
- [국내 채굴 확대] 광물 원자재 재활용률 확대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 광물 채굴 확대를 추진, 이를 위해 광산업 관련 연방 법령을 개정할 계획. 다만, 국내 광물 채굴 확대는 반드시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
- [공급망 다변화] 재활용 및 국내 채굴로 충당하기 어려운 광물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광물 원자재 수입원을 다변화. 특히 러시아, 중국 등 일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, 칠레, 호주, 캐나다 등과 전력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
- 다만, 환경, 사회 및 거버넌스(ESG)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로부터 광물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고, 이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국제 ESG 기준 채택을 추진

⑦ 프랑스,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

●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

-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(수)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

-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, 배터리,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,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,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
- 또한,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, 이른바 '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'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,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
-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,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
- 작년 말 상업용 수입 전기차에 대한 IRA법 보조금 혜택 부여 등 미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근본적인 차별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, 자국 친환경 산업 유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
- 한편,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에 IRA법에 대응,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을 요구한 상태이며, 차기 2월 정상회의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

⑧ 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

- [핵심 광물 원자재법] 집행위는 3월 14일(화) '핵심 광물 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' 법안을 발표할 예정
 -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공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
 - 특히,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,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
- [특허 분야] '세계지적재산권의 날'인 4월 26일(수) 집행위는 특허 라이선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
 -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(Compulsory Licensing) 및 표준필수특허(Standard Essential Patents, SEP)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(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, SPC)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
- [수소 은행] 집행위는 5월 17일(수) 이른바 '수소 은행(Hydrogen Bank)'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
 -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작년 말 급증하는 수소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약 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, 수소 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

- 수소 분야와 관련, 올해 운송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2개의 '유럽 공통 중요 이해관계 프로젝트(IPCEI)'가 발족할 예정
- 기타 집행위의 산업정책 프로그램으로 △5월 3일(수)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관련 이니셔티브, △5월 24일(수) EU 차원의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 시스템, △5월 31일(수) 제품 수리 및 재사용 촉진 이니셔티브 등이 주목됨

⑨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

-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됨
-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,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
-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*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 통제 도입을 압박,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
- * 미국,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%를 생산. 네덜란드 ASML은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%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.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(EUV-machines)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, 심자외선 노광장비(DUV-machines)는 중국에 수출중
-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한 이해 등으로,
- 네덜란드 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공감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제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
- 다만, 최근 중국 정부가 유럽 일부 국가에 비밀 경찰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,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의 對중국 대응이 다소 강경해지는 등 정부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
- 한 EU 외교관계자는 EU 내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에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, 가전제품용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는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
- 이와 관련, ASML 대표는 이미 EUV 장비의 對중국 판매 금지에 동참하고 있으나, 무기제조용 반도체는 중국도 이미 확보한 10~15년전의 기술이며, 중국의 무기 제조능력 강화 방지가 수출통제의 이유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

- 또한, 글로벌 반도체 벨류체인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, 자유로운 글로벌 반도체 교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
- 한편, 수출통제는 EU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이나,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정부의 결정은 유럽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
- 작년 독일, 영국이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하고, 최근 네덜란드도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평가 실행 계획을 발표
- EU는 반도체 공급사태 이후 역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에코시스템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

II

EU 환경규제 뉴스 - KIST EUROPE 제공

① 유럽집행위원회, 최종 CLP 개정안 발표

- 유럽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, 이하 위원회), 내분비장애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 추가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(CLP) 위임법률(Delegated Regulation) 및 부속서(Annex)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.
- 12월 19일에 발표된 CLP 개정안은 예정된 REACH 개정과 함께 유럽 그린딜(Green Deal)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인 '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(CSS)'의 중요 부분임.

[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\(클릭\)](#)